

노인의 범죄피해 특징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허 정 미*

(국문 요약)

범죄화제나 형사사법기관에서는 60세 이상의 사람을 노인이라고 정하고, 관련 정책입안과 통계관리를 하고 있으나 노인의 복지나 취업 등과 관련해서는 그 기준연령이 차이가 있다.

노인의 범죄피해는 형법범 피해와 특별법 피해로 구분할 수 있다. 형법범에 대한 피해는 재산범이 가장 많으며, 다음이 강력범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른 연령층보다 재산범죄의 피해는 줄고, 상대적으로 강력범죄와 위조범, 풍속범죄 등의 피해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재산범 피해는 사기와 절도가 가장 많다. 강력범 피해는 상해, 다음이 폭행, 강도, 협박, 방화, 강간, 살인, 공갈, 체포와감금, 약취와유인 등의 순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별법에 대한 노인의 피해는 교통사범과 폭력사범,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사범 등에 의한 피해가 대부분이며, 최근에는 성폭력사범 피해도 증가하는 경향이다.

노인의 범죄피해대책은 1차적으로 범죄에 대한 노인의 경계의식이 선행되어야 하며, 2차적으로는 노인을 배려한 경찰행정과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활성화, 그리고 민간의 피해자지원네트워크의 구축 등이 필요하다.

☉ 키워드: 노인범죄피해, 노인범죄피해대책, 노인범죄

목 차

- I. 서 론
- II. 노인의 범죄피해에 관한 이론적 배경
- III. 노인의 범죄피해 실태 및 특징
- IV. 노인의 범죄피해 대책
- V. 결 론

I. 서 론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高齡化)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2%로 유엔이 정한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다.¹⁾ 또 19년 뒤인 2019년에는 14.4%로 높아져 고령사회가 되고 다시 7년 뒤인 2026년에는 23.1%로 초(超)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였는데 이는 통계가 비교 가능한 국가들 가운데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²⁾.

이와 같은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개인적으로는 노인자신의 소외감과 질병, 경제적 빈곤 등의 문제와 함께 사회적으로는 노동인구 비율 감소, 저축률 하락, 국가재정 악화 등의 부작용을 야기한다. 특히 범죄에 대한 노인의 피해도 늘어나 결과적으로 이를 다시 가족이나 사회가 해결해야하는 이중적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1)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총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정의하고 있다. 통계청 <http://www.nso.go.kr/newcms/main.html>
 2)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 데에는 프랑스가 115년으로 가장 길었고 미국 72년, 독일 40년, 일본 24년이였다.

그러나 노인의 범죄피해 실태에 대한 선행연구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이는 노인의 범죄피해에 대한 연구가 1980년대 초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것으로 아직 전체 범죄피해 중 노인의 피해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범죄학자들이나 형사사법기관의 관심이 덜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노인의 범죄피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노인인구의 증가로 그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노인의 범죄피해의 실태 및 특성에 대해 분석하여 향후 관련 정책적 대안 모색의 지표를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노인범죄의 피해를 알아보기 위하여 1995년부터 2002년까지³⁾ 대검찰청에서 발간된 범죄분석과 법무연수원의 범죄백서, 그리고 통계청의 자료를 주로 활용하였다. 범죄를 형법범과 특별법으로 나누고, 다시 형법범을 재산범, 강력범, 위조범, 공무원범, 풍속범, 과실범 등으로 분류하여 연구대상기간 중 이들 범죄에 대한 노인의 피해와 노인을 제외한 전체 범죄피해 추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재산범을 다시 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손괴 등으로, 그리고 강력범을 다시 살인, 강도, 강간, 방화, 폭행, 상해, 약취와유인, 체포와감금 등으로 재분류하여 이들 범죄에 대한 노인과 노인을 제외한 기타 연령층의 피해를 비교분석하였다. 특별법 분야는 그 범주가 매우 광범위하므로 그 중 가장 피해가 큰 교통사범, 폭력사범, 특가법사범 및 특별히 관심이 필요한 성폭력사범 등에 대한 노인의 범죄피해의 추세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빈도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3) 노인의 범죄피해연구 대상범위를 1995년부터 2002년까지로 한정된 것은 범죄 및 범죄 피해에 대한 공식통계기관인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백서인 「범죄분석」이 1995년부터 노인의 범죄피해에 대한 신뢰할만한 별도의 공식집계를 시작했고, 그리고 가장 최근 발간된 것이 2002년도 보고서인 점을 감안한 것임.

II. 노인의 범죄피해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노인의 개념

일반적으로 노인이란 육체적으로 노화현상이 뚜렷하고, 평생 종사하던 직장을 퇴직하는 시기인 60세 혹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의미의 노인의 개념은 일치된 것이 아니며, 범죄학이나 노년학, 그리고 노인관련법이나 제도 등에 따라 그 견해가 매우 다양하다.

1951년의 제2회 국제노년학회에서는 노인의 개념을 노인이란 생리적, 신체적 기능의 감퇴와 심리적인 변화로 인하여 개인의 자기유지기능과 사회적 기능이 약화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다.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법에서는 정년퇴직연령은 65세 이상, 사회보장혜택은 62세 이상을 노인으로 인정하고 지원하지만, 공공주택보조금은 60세 이상, 직업훈련지원은 55세 이상으로 하고 있어 관련법과 프로그램에 따라 노인의 기준을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법인 노인복지법에서는 경로연금지급대상자를 65세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령은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그리고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경우를 준고령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에서는 5급 이상은 60세로, 6급 이하는 57세로 정하여 대체로 57세 이상을 노인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노인을 정하는 연령에 대한 기준이 다르지만, 범죄 및 범죄피해에 관한 공식통계를 관리하는 경찰이나 검찰은 노인의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인정하고, 관련 통계를 산출하고 있으며, 범죄학계에서도 이를 수용하는 추세이다(강은영, 2001; 이건종, 전영실, 1995; 이현희, 원영희, 구자숙; 2003, 오홍수; 2002 등).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노인의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하며, 제시된 통계 역시 60세 이상의 노인의 범죄피해를 의미한다.

그런데 노년학(gerontology)에서는 노인이란 육체적 기능의 감퇴와 심

리적인 변화로 개인의 자기유지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사회적 역할 및 기능이 상실되거나 저하되어 가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⁴⁾. 이러한 노인의 특성으로 첫째, 우울성을 들고 있다. 노인은 대체로 젊은 이 보다 스트레스의 양은 적지만 퇴직으로 인한 정체성 상실, 직장, 동료들과의 단절에서 오는 상실감, 쓸모 없는 사람이라는 무력감, 자녀 등 다른 사람에게 삶을 의존하는 데 따르는 좌절감, 배우자의 죽음이나 질병에서 오는 외로움 등으로 인해 우울증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다. 둘째, 노인은 경제적·신체적·정신적·사회적·심리적·정서적 의존성이 있으며,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향적인 성격으로 변화한다. 그리고 주위의 친숙한 물건이나 사물, 사람에 대해 애착심을 가지게 된다. 셋째, 노인은 정신적 혹은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길 원하고, 아직도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한다. 넷째, 노인은 친구나 자녀들과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유대관계를 가지길 원하며, 자신의 존재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한다.

이와 같은 노인의 특성은 노인의 범죄에 대한 피해에서도 다른 연령 계층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에서도 증명된다.

2. 선행연구의 검토 및 이론적 배경

노인의 범죄피해의 가장 큰 특징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며, 범죄피해의 결과가 지속적이고,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FBI는 공식통계인 UCR(Uniform Crime Reports)을 통하여 많은 범죄들은 특정연령과 상관성이 있다고 밝히면서 노인의 범죄피해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⁵⁾ 첫째, 사기와 횡령, 핸드백날치기, 소매

4) 홍숙자, 2001, 노년학개론, 하우출판사, 35-36.

5) 미국의 범죄피해조사(NCVS)에 따르면 2001년의 경우 65세 이상 폭력범죄 피해는 전체의 3.7%(32,702,210명)이며, 이 중 강간, 추행 0.1%, 강도 0.7%, 폭력, 상해 2.9%인 것으로 밝혀졌다. 절도피해는 전체의 1.2%로 나타났다(Callie Marie Rennison, criminal Victimization 2000 change 1999-2000 with Trends 1993-2000, 2001:16, <http://www.rainn.org/Linked%20files/NCVS%202000.pdf>)

치기, 메일박스에서 투표함치기, 장기수용시설에서의 범죄행위 등은 젊은 세대들보다 노인에게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다른 연령층보다 노인의 경우 보험, 연금운용계획, 주택매매계획, 사회복지기금, 저축 등을 가지고 있어 범죄자들에게는 매력적인 범죄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자녀나 이웃과 교류를 하지 않고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경제지식이나 투자정보 등에 어둡기 때문에 주위에서 친절을 베풀며 접근할 경우 범죄자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다. 둘째, 노인은 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될 확률이 다른 연령층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노인은 물리적인 저항을 하기에는 육체적으로 한계가 있어 상대방으로부터 공격을 받기 쉽다.

셋째, 노인의 범죄피해는 물질적, 육체적으로도 회복하기 어렵지만 특히 정신적인 좌절감과 패배감 등에 빠지는 등 회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노인은 자신이 완벽하지 못해 범죄를 당했다고 생각하여 자기존중감을 상실하거나 더 이상 혼자살기 어렵다는 자괴감 등에 빠져 결과적으로 노인 우울증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 넷째, 범죄를 경험한 노인이 신고를 꺼린다는 점이다. 특히 폭력사건의 경우 범죄의 재발과 보복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대부분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지 못한다. 범죄를 신고한 노인들은 자신의 건물을 더럽히거나 훼손하는 행위, 정원잔디나 나무 또는 자동차를 손상 당하는 등의 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미야자와 고이치는 노인의 범죄피해 특성을 생물학적인 측면과 사회적, 심리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⁶⁾. 우선 그는 노인은 육체적으로 쇠약하여 운동량이 적어지고, 충격에 대한 순간적인 반응, 판단력의 저하, 사고의 탄력성의 둔화를 보인다고 한다. 이러한 현상들은 결과적으로 날치기나 교통사고 또는 시기 등의 범죄를 당하는 원인이 된다.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사회의 제일선에서 물러나 은퇴생활을 하기 때문에 빈곤한 생활을 하게 되며, 각종 문명이기에 대한 사용법을 몰라 불편함을 겪고, 경우에 따라서는 쉽게 유혹을 당해 사기나 배임

6) 미야자와 고이치저, 장규원 역, 1999, 피해자학입문, 길안사, 226-227.

사건의 피해자가 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 보다 높다. 셋째, 사회생활에서의 소외는 노인을 초조하고 불안하게 하고, 사고의 유연성을 부족하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사람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자기중심적 사고는 타인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결국 사소한 일을 가지고 주위의 사람과 말다툼이나 몸싸움을 벌여 폭행사건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노인의 범죄피해를 범죄피해이론 중 생활양식노출이론(lifestyle-exposure theory)과 일상활동이론(routine activity theory)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먼저 생활양식노출이론의 기본적 가설은 개인의 생활양식에 따라 범죄피해의 위험성이 달라진다는 것이다⁷⁾. 즉, 개인의 직업활동과 여가활동 등의 일상활동양식은 당사자의 범죄피해위험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생활양식이론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수는 성별차이와 소득차이를 들 수 있는데 전통적인 생활양식대로라면 남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사회생활이나 집 밖에서의 생활이 많으므로 범죄에 노출될 기회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소득이 적은 경우 일수록 주거나, 여가활동, 교통수단 등에서 안전을 보장받기 어려우므로 소득이 많은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범죄적 환경에 노출될 수 있다. 따라서 젊은 사람, 남자, 미혼자, 저소득층, 그리고 저학력층 등은 노년층, 여자, 기혼자, 고소득층, 그리고 고학력층 보다 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피해에 대한 경험적 연구결과(이건중, 전영실, 1995) 절도나 강도피해의 경우 집안에서 보다 집근처나 지하철, 버스, 택시 등의 대중교통수단, 길거리 등 집 밖에서 더 많은 강도피해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시간은 주로 오후와 저녁시간대로서 노인들이 집 밖에서 활동하는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또한 폭행피해의 경우도 자신의 집보다는 타인의 집이나 술집, 여관 등의 유흥업소, 길거리 등이 대부분이어서

7) Michael S. Hindelang, Michael Gottfredson, and James Garofaro, 1978, *Victims of Personal Crime*, Cambridge, 241.

노인의 생활양식스타일이 범죄피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이론 중 두 번째 일상활동이론은 자신의 일상활동 유형에 따라 범죄의 기회를 증가시킬 수도 있고, 감소시킬 수도 있다고 본다⁸⁾. 보석이나 고가의 물건, 신용카드를 소지하거나 보관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범죄의 피해자가 될 확률이 높고, 외부활동시간이 많을수록 범죄의 잠재적 피해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보호나 방어수단을 견고히 하면 범죄의 피해자가 될 확률이 낮아진다. 이에 대해서도 이진종, 전영실(1995)은 평소에 돈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노인이, 그리고 옷차림이 고급인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평상시 외출이 많은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범죄피해를 더 많이 당하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그러나 외출시 동행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더 많이 범죄의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일상활동이론이 주장하는 것이 노인의 범죄피해의 경우에도 부분적으로 일치함을 알 수 있다.

범죄피해에 대한 생활양식이론과 일상활동이론의 공통점은 첫째, 개인의 일상활동이나 생활양식이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 둘째, 범죄피해자가 매력적일수록, 즉 경제적, 상징적 가치가 높거나 물리적 저항이 적은 경우일수록, 셋째, 범죄대상의 방법능력, 개인적 방법체계 및 사회적 안전망 등이 느슨할수록 범죄의 피해자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범죄피해이론을 전제로 노인의 범죄피해실태를 공식적인 통계를 통하여 살펴보고 그 특징을 분석해본다.

Ⅲ. 노인의 범죄피해 실태 및 특성

1. 형법범죄의 피해증가

<표 1>에 의하면 노인의 형법범죄피해 가운데에는 1995년도에는 재산범죄가 전체의 61.9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강력범죄

8) Lawrence E. Cohen and Marcus Felson, 1979, "Social Change and Crime Rate Trends: A Routine Activity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44, 588-593.

18.59%, 위조범죄 5.16%, 과실범죄 3.79%, 풍속범죄 0.62%, 공무원범죄 0.44% 등의 순이었다. 이와 같은 형법범죄 피해는 대체로 매년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데 2001년도에는 재산범죄가 65.39%, 강력범죄 18.22%, 위조범죄 3.79%, 과실범죄 2.71%, 풍속범죄 1.11%, 공무원범죄 0.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형법범죄에 대한 노인의 피해가 가장 많은 범죄는 재산범죄이며, 다음이 강력범죄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1> 노인의 형법범죄 피해현황

(단위 : 건수, %)

구분 \ 연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계	비율	계	비율	계	비율	계	비율	계	비율	계	비율	계	비율
총계	10,708	100.00	11,600	100.00	11,110	100.00	12,037	100.00	13,690	100.00	16,155	100.00	17,107	100.00
재산범죄	6,629	61.91	7,742	66.74	7,329	65.97	8,096	67.26	8,810	64.35	10,469	64.80	11,187	65.39
강력범죄	1,991	18.59	1,957	16.87	1,936	17.43	2,227	18.50	2,722	19.88	3,092	19.14	3,117	18.22
위조범죄	552	5.16	480	4.14	432	3.89	423	3.51	571	4.17	610	3.78	648	3.79
공무원범죄	47	0.44	21	0.18	21	0.19	19	0.16	25	0.18	33	0.20	37	0.22
풍속범죄	66	0.62	55	0.47	56	0.50	67	0.56	74	0.54	106	0.66	190	1.11
과실범죄	406	3.79	403	3.47	392	3.53	315	2.62	314	2.29	475	2.94	463	2.71
기타	1,017	9.50	942	8.12	944	8.50	890	7.39	1,174	8.58	1,370	8.48	1,465	8.56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1995년~2002년 재구성

<표 2>에 의하면 노인을 제외한 다른 연령층의 형법범죄 피해는 1995년의 경우 재산범죄가 전체의 76%, 강력범죄 12.02%, 풍속범죄 2.65%, 위조범죄 2%, 과실범죄 1.92%, 공무원범죄 0.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01년도에는 재산범죄가 75.68%, 강력범죄 13.14%, 위조범죄 2.21%, 풍속범죄 1.59%, 과실범죄 1.57%, 공무원범죄 0.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과 비교할 때 노인이 재산범죄는 -10.29%, 강력범죄 +5.08%, 위조범죄 +1.79%, 과실범죄 +0.35%, 풍속범죄 +1.05%, 공무원범죄 -0.09% 등의 차이를 보인다. 즉 최근에 노인이 다른 연령층보다 재산범죄

죄의 피해는 줄고, 상대적으로 강력범죄와 위조범, 풍속범죄 등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노인 형법범죄는 2000년 말을 기준으로 전체 형법범 중에서 3.4%를 차지하며, 노인 재산범죄는 전체 재산범의 2.8%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의 강력범죄는 전체 강력범의 4.5%로 1995년의 3.0%보다 1.5% 증가하였다.

<표 2> 노인을 제외한 형법범죄 피해현황

(단위 : 건수, %)

연도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계	비율	계	비율	계	비율	계	비율	계	비율	계	비율	계	비율
총계	250,411	100.00	269,118	100.00	253,421	100.00	254,736	100.00	237,352	100.00	269,364	100.00	278,521	100.00
재산범	190,322	76.00	210,274	78.13	196,651	77.59	198,678	77.99	175,696	74.02	202,852	75.30	210,803	75.68
강력범	30,104	12.02	30,514	11.33	28,851	11.38	29,689	11.65	33,201	13.98	36,864	13.68	36,613	13.14
위조범	5,383	2.00	5,488	2.00	5,290	2.08	5,084	1.99	5,778	2.43	5,877	2.18	6,161	2.21
공무원범	341	0.13	277	0.10	169	0.06	252	0.09	739	0.31	292	0.10	266	0.09
풍속범	6,646	2.65	4,833	1.79	5,244	2.06	4,822	1.89	4,665	1.96	4,716	1.75	4,432	1.59
파살범	4,816	1.92	5,025	1.86	4,796	1.89	3,673	1.44	3,447	1.45	3,995	1.48	4,374	1.57
기타	12,799	5.11	12,707	4.72	12,420	4.90	12,538	4.92	13,826	5.82	14,768	5.48	15,872	5.69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1995년~2002년 재구성.

노인의 형법범죄 피해는 1995년도에 10,708건이었으나 2001년에는 17,107건으로 59.75% 증가하였다. 이는 <표 2>의 전체 형법범 피해가 1995년도에는 250,411건이던 것이 2001년에는 278,521건으로 11.22%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48.53%나 많은 것은 것으로 노인이 다른 연령층보다 다섯 배 정도 더 많이 재산범죄의 피해가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1995년부터 2001년까지 7년 동안 노인을 제외한 연령의 재산범죄 피해는 평균 76.49%인데 비하여, 노인의 경우 65.20%으로서 노인이 다른

연령층보다 11.28%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사기와 절도범죄의 집중적인 피해

<표 3>에 의하면 노인의 재산범죄 피해는 사기와 절도가 가장 많은데 1995년의 경우 사기 64.49%, 절도 18.78%, 1996년 사기 66.70%, 절도 19.28%, 1997년 사기 62.20%, 절도 24.49%, 1998년 사기 61.96%, 절도 24.88%, 1999년 사기 60.74%, 절도 24.31%, 2000년 사기 47.68%, 절도 38.88%, 2001년 사기 49.40%, 절도 36.68%로 나타났다.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사기피해가 60%이상을 차지하다가 2000년 이후 40%대로 급감하고, 대신 절도피해가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1995년부터 2001년까지 노인의 재산범죄 피해를 최종별로 평균산출하면 절도는 26.75%, 장물 0.28%, 사기 59.02%, 횡령 7.45%, 배임 2.33%, 손괴 4.14%으로 노인은 사기, 절도, 횡령, 손괴, 배임, 장물 등의 순으로 재산범죄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의 <사례 1>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절도의 가장 전형적인 경우로서 노인의 순진함과 타인에 대한 신뢰성을 악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표 3> 노인의 재산범죄 피해현황

연도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계	비율	계	비율	계	비율	계	비율	계	비율	계	비율	계	비율
총 계	6,629	100.00	7,742	100.00	7,329	100.00	8,096	100.00	8,810	100.00	10,469	100.00	11,187	100.00
절 도	1,245	18.78	1,493	19.28	1,795	24.49	2,014	24.88	2,142	24.31	4,070	38.88	4,103	36.68
장 물	16	0.24	18	0.23	23	0.31	45	0.56	30	0.34	13	0.12	19	0.17
사 기	4,275	64.49	5,164	66.70	4,559	62.20	5,016	61.96	5,351	60.74	4,992	47.68	5,526	49.40
횡 령	602	9.08	588	7.59	507	6.92	578	7.14	713	8.09	669	6.39	782	6.99
배 임	204	3.08	209	2.70	168	2.29	170	2.10	210	2.38	210	2.01	198	1.77
손 괴	287	4.33	270	3.49	277	3.78	273	3.37	364	4.13	515	4.92	559	5.00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1995년~2002년 재구성.

【사례 1】 구청공무원 사칭 노인들 등쳐/ “생활보호 지정에 필요” 20여명 통장 가로채⁹⁾

대전북부경찰서는 27일 노인들에게 공무원을 사칭, 생활 지원금을 주겠다고 속인 뒤 저금통장을 받아 가로채는 수법으로 21차례에 걸쳐 5,086만원을 인출한 한모(43)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한씨는 부산 대구 대전 수원 등 전국을 돌며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혼자 사는 노인들만을 방문, 구청 사회복지과 직원이라고 속인 뒤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해 매달 20만원씩 지원해드리겠다”며 통장을 보고 예금이 있는 지 확인했다. 한씨는 이어 “생활보호대상자 신청서에 찍어야 한다”며 도장을 건네 받아 미리 준비해간 은행 출금전표에 찍고 “지원금을 통장에 입금시키려면 비밀번호가 필요하다”며 비밀번호도 물어 알아냈다. 경찰 수사관계자는 “노인들은 이름표까지 달고 공무원 행색을 한 한씨의 말에 너무 쉽게 속아넘어갔다”고 말했다.

<표 4> 노인을 제외한 재산범죄 피해현황

(단위 : 건수, %)

연도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계	비율	계	비율	계	비율	계	비율	계	비율	계	비율	계	비율
총계	190,322	100.00	210,274	100.00	196,651	100.00	198,678	100.00	175,696	100.00	202,852	100.00	210,803	100.00
절도	47,410	24.91	52,927	25.17	60,612	30.82	57,096	28.73	49,431	28.13	95,405	47.03	97,673	46.33
장물	525	0.27	531	0.25	494	0.25	621	0.31	800	0.45	532	0.26	460	0.21
사기	119,964	63.30	134,957	64.18	115,936	58.95	119,713	60.25	105,655	60.13	86,440	42.61	91,885	43.58
횡령	16,467	8.74	15,768	7.49	13,843	7.03	15,110	7.60	13,064	7.43	10,853	5.35	11,170	5.29
배임	3,060	1.60	3,045	1.44	2,546	1.29	2,786	1.40	2,848	1.62	1,974	0.97	1,682	0.79
손괴	2,896	1.52	3,046	1.44	3,220	1.63	3,352	1.68	3,898	2.21	7,648	3.77	7,933	3.76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1995년~2002년 재구성.

9) 한국일보, 2003. 7. 28:7. 전성우, 구청공무원 사칭 노인들 등쳐/ “생활보호 지정에 필요” 20여명 통장 가로채

1995년부터 2001년까지 노인을 제외한 다른 연령층의 재산범죄의 최종별 평균 피해는 절도 33.01%, 사기 56.14%, 장물 0.28%, 횡령 6.99%, 배임 1.30%, 손괴 2.28%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장 많은 피해는 사기이며, 다음이 절도, 횡령, 손괴, 배임, 장물 등의 순이다. 이는 재산범죄에 대한 노인의 범죄피해의 순서와 동일한 것이다.

3. 상해 및 폭행범죄 피해의 증가

<표 5>에 의하면 강력범죄 중 노인의 피해가 가장 많은 것은 상해와 폭행이며, 1995년의 경우 상해 64.04%, 폭행 20.14%, 1996년 64.54%, 폭행 19.57%, 1997년 상해 62.04%, 폭행 17.30%, 1998년 상해 62.06%, 폭행 19.35%, 1999년 상해 60.58%, 폭행 22.01%, 2000년 상해 59.77%, 폭행 23.12%, 2001년 상해 59.13%, 폭행 24.67%로 나타났다. 1999년 이후 상해가 약간 감소하고 폭행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1995년부터 2002년까지 강력범죄의 최종별 노인의 피해평균치는 살인 2.03%, 강도 5.75%, 방화 2.55%, 강간 2.49%, 폭행 20.88%, 상해 61.73%, 협박, 2.85%, 공갈 1.23%, 약취와유인 0.04%, 체포와감금 0.41%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의 가장 피해가 많은 강력범죄는 상해, 다음이 폭행, 강도, 협박, 방화, 강간, 살인, 공갈, 체포와감금, 약취와유인 등의 순인 것을 알 수 있다.

<표 5> 노인의 강력범죄 피해현황

(단위 : 건수, %)

구분	연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계	비율	계	비율	계	비율	계	비율	계	비율	계	비율	계	비율	계	비율
총계	1,991	100.00	1,957	100.00	1,936	100.00	2,227	100.00	2,722	100.00	3,092	100.00	3,117	100.00		
살인	32	1.61	38	1.94	47	2.43	51	2.29	54	1.98	62	2.01	61	2.01		
강도	84	4.22	105	5.37	155	8.01	174	7.81	151	5.55	167	5.40	123	3.95		
방화	46	2.31	40	2.04	61	3.15	58	2.60	69	2.53	84	2.72	79	2.53		
강간	59	2.96	50	2.55	58	3.00	46	2.07	70	2.57	63	2.04	70	2.25		

구분 \ 연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계	비율	계	비율	계	비율	계	비율	계	비율	계	비율	계	비율
폭행	401	20.14	383	19.57	335	17.30	431	19.35	599	22.01	715	23.12	769	24.67
상해	1,275	64.04	1,263	64.54	1,201	62.04	1,382	62.06	1,649	60.58	1,848	59.77	1,843	59.13
협박	62	3.11	49	2.50	48	2.48	54	2.42	84	3.09	96	3.10	102	3.27
공갈	25	1.26	18	0.92	17	0.88	25	1.12	36	1.32	45	1.46	52	1.67
약취와유인	0	0.00	3	0.15	1	0.05	0	0.00	0	0.00	2	0.06	2	0.06
체포와감금	7	0.35	8	0.41	13	0.67	6	0.27	10	0.37	10	0.32	16	0.51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1995년~2002년 재구성

특히 노인의 살인범죄 피해는 전체 강력범 중 그 비중은 낮지만 매년 꾸준히 증가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노인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노인인구의 증가 등 살인의 피해자가 될 유인성이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생각되며, 이와 같은 사실은 점차 절도범의 피해가 사기범의 피해보다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도 그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사례 2】 부유층 노인 연쇄살인 공포확산 - 강남등 3곳서 20일동안 잇따라 둔기 피살¹⁰⁾

2층 단독주택에 사는 돈 많은 노인만을 노리는 공포의 연쇄살인범인가?

지난달 24일 발생한 강남구 신사동 노(老)교수 부부 살해사건과 지난 9일 종로구 구기동 일가족 피살사건에 이어 또다시 60대 노인이 비슷한 수법으로 잔인하게 살해된 채 발견됐다. 불과 20여일 만에 잇따라 발생한 세 사건은 피해자들이 몇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중략)...

10) 문화일보, 2003. 10. 17:31, 이종석, 부유층 노인 연쇄살인 공포확산 - 강남등 3곳서 20일동안 잇따라 둔기 피살

우선 범행 장소와 수법이 거의 비슷하다. 세 주택은 모두 80년대 초·중반에 지어진 2층짜리 단독주택으로 담이 낮아 바깥에서도 집안 내부를 쉽게 들여다 볼 수 있다. 범행방법도 모두 머리와 얼굴 등을 둔기로 여러 차례 맞아 잔인하게 살해됐으며, 발견 당시 현관문 또는 대문이 모두 잠겨진 상태였다는 점도 일치한다.

피해자들이 모두 수십억원대의 재산가라는 점 또한 공통점이다. 신사동 노부부는 80억원대 재산가로 알려졌다며, 부인과 아들, 어머니 등 3명이 함께 살해된 구기동 사건의 주차관리원 고모(61)씨도 45억원대 재산가로 알려졌다. 또 삼성동 유씨의 경우도 남편 최씨가 50억원대의 재산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며, 최근 충남 아산에 있는 2만평짜리 과수원을 23억원에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 6>에 의하면 노인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층의 강력범죄에 대한 피해는 대체로 상해, 폭행, 강간의 3대 범죄가 주를 이룬다. 1995년의 경우 상해는 54.95%, 강간 13.63%, 폭행 12.93% 등이었으며, 1996년에는 상해 54.17%, 강간 15.06%, 폭행 12.61%이었다. 1997년에는 상해 52.12%, 강간 14.89%, 폭행 12.10%이며, 1998년에는 상해 49.34%, 폭행 15.77%, 강간 13.92%으로 폭행피해가 강간범죄피해보다 처음으로 증가하였다. 1999년에는 상해 50.19%, 폭행 20.35%, 강간 12.54%이며, 2000년에는 상해 46.90%, 폭행 24.48%, 강간 11.56%이며, 2001년에는 상해 45.04%, 폭행 22.99%, 강간 11.92%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중 노인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층의 강력범죄 중 최종별 피해 평균치는 살인 1.81%, 강도 9.30%, 방화 1.59%, 강간 13.36%, 폭행 17.30%, 상해 50.38%, 협박 1.95%, 공갈 3.22%, 약취와유인 0.45%, 체포와감금 0.53% 등이다. 따라서 피해가 가장 많은 강력범죄는 상해이며, 다음이 폭행, 강간, 강도, 공갈, 협박, 살인, 체포와감금, 약취와유인 등의 순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노인과 비교하면 노인은 상해, 폭행, 강도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고, 기타 연령층은 상해, 폭행, 강간 등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표 6> 노인을 제외한 강력범죄 피해현황

(단위 : 건수, %)

구분	연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계	비율	계	비율	계	비율	계	비율	계	비율	계	비율	계	비율	계	비율
총계	30,104	100.00	30,514	100.00	28,851	100.00	29,691	100.00	33,201	100.00	36,843	100.00	36,613	100.00		
살인	521	1.73	536	1.75	566	1.96	639	2.15	614	1.84	570	1.54	632	1.72		
강도	2,682	8.90	2,737	8.96	3,129	10.84	3,462	11.66	2,767	8.33	2,950	8.00	3,086	8.42		
방화	417	1.38	469	1.53	442	1.53	536	1.80	504	1.51	586	1.59	657	1.79		
강간	4,106	13.63	4,597	15.06	4,298	14.89	4,134	13.92	4,165	12.54	4,262	11.56	4,366	11.92		
폭행	3,893	12.93	3,848	12.61	3,493	12.10	4,683	15.77	6,758	20.35	9,020	24.48	8,419	22.99		
상해	16,543	54.95	16,531	54.17	15,040	52.12	14,652	49.34	16,664	50.19	17,281	46.90	16,494	45.04		
협박	509	1.69	511	1.67	539	1.86	496	1.67	630	1.89	736	1.99	1,074	2.93		
공갈	1,202	3.99	1,002	3.28	963	3.33	789	2.65	834	2.51	1,060	2.87	1,452	3.96		
약취와유인	96	0.31	122	0.39	193	0.66	135	0.45	109	0.32	166	0.45	227	0.61		
체포와감금	135	0.44	161	0.52	188	0.65	165	0.55	156	0.46	212	0.57	206	0.56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1995년~2001년 재구성.

4. 폭력사범의 급증

<표 7>은 노인의 특별법범죄 피해 중 대표적인 것을 산출한 것으로 교통범죄, 폭력사범,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범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의 경우에도 성폭력범죄의 피해가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특징적이다.

교통범죄의 경우 1995년 이후 감소추세를 보이다가 2001년도에는 급증하였으며, 폭력사범은 증감을 반복하다가 2000년 이후 급증하여 2001년도의 경우는 1995년도에 비하여 무려 108.07%나 증가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범죄 피해는 매년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 1995년도에 비해 2001년도에는 75.72%나 증가하였다. 성폭력범죄의 경우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강간이나 성폭력은 대체로 젊은 여성이 당할 것이라라는 기존

의 통념을 바꾸는 것이고, 동시에 일상활동이론이나 생활양식이론으로 설명하기 곤란한 현상이다. 이는 노인에 대한 성폭력이나 강간은 범인의 성적 욕구충족 자체가 목적인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사례 2】와 같이 노인의 성적 수치심과 주위사람에 대한 명예 손상 등의 심리를 악용하여 재물을 빼앗는 수단인 경우도 많다.

<표 7> 노인의 특별범죄 피해현황

(단위 : 건수, %)

연도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교통법	17,863 (100.00)	17,089 (99.04)	16,071 (89.96)	14,056 (78.68)	14,999 (83.96)	14,912 (83.47)	16,287 (91.17)
폭력사범	2,315 (100.00)	2,421 (104.57)	2,311 (99.82)	2,709 (117.01)	2,412 (104.19)	3,988 (172.6)	4,817 (208.07)
특정범죄	659 (100.00)	767 (116.38)	762 (115.62)	776 (117.75)	968 (146.88)	1,116 (169.34)	1,158 (175.72)
성폭력법	2 (100.00)	11 (550.00)	6 (300.00)	8 (400.00)	21 (1,050.00)	29 (1,450.00)	31 (1,550.00)

자료 : 대검찰청, 범죄분석, 1995년~2002년 재구성.

【사례 3】 40대 여자 80대 노인 성추행 뒤 “간통 협박”¹¹⁾

서울 남부경찰서는 27일 80대 노인을 협박, 거액을 뜯어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위반등)로 이모(여·46)씨를 구속.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8년 6월 이모(80)씨의 가정부로 일하던 중 몸이 불편한 이씨를 강제로 추행한 뒤 “가족들에게 알리고 간통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 500만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90여차례에 걸쳐 모두 5억여원을 뜯어낸 혐의이다.

한편 노인의 폭력사범의 전체폭력사범에 대한 비중은 2000년 말을

11) 문화일보, 2003. 3. 27:27, 이종석, <바람개비>40대女 80노인 성추행뒤 “간통 협박”

기준으로 5.0%이며, 성폭력사범의 경우는 2.4%를 차지하고 있다(이현희, 원영희, 구자숙, 2003: 131).

IV. 노인의 범죄피해 대책

노인의 범죄 피해대책은 1차적으로 범죄에 대한 노인의 경계의식이 선행되어야 하며, 2차적으로는 피해노인에 대해 국가와 사회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특히 노인의 특성상 다른 연령층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세심하고, 적극적이며, 실질적인 지원책이 요구된다는 점에 기초를 두었다.

1. 노인층의 방법의식 강화

앞서 <표 1>부터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노인의 범죄피해가 매년 늘어나고 있고, 특히 재산범죄의 경우 사기와 절도범의 피해가 전체 재산범죄의 85.7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횡령과 배임 등을 포함할 경우 전체 재산범죄의 95.55%를 차지하게 된다. 그런데 절도를 제외한 이들 재산범죄의 특성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사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거나(횡령),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배임)이다.

이와 같은 범죄는 소외감이나 투자지식의 부족 등으로 자신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을 잘 믿거나 자신의 경제적 상태를 쉽게 공개하는 등의 노인의 특성을 악용하는 범죄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피해이론 중 생활양식노출이론에 의하면 노인은 청장년층에 비해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을 덜 하기 때문에 범죄의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적다고 한다. 그러나 최근 노인인구의 증가와 평균수명의

연장, 노인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 등으로 노인도 직장생활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지속적으로 하여 노인 역시 범죄적 환경에 노출될 기회가 많아졌고, 과거보다 재산범죄의 피해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상활동이론에 의해서도 노인의 범죄피해는 설명될 수 있는데 현재의 노인은 과거보다 경제적으로 풍족한 생활을 하여 범죄의 표적이 될 확률이 높다. 재산범죄에 이어 노인의 강력범죄 피해가 증가하는 것도 노인의 생활스타일의 변화의 영향이 크다. 과거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 등이 늘어나면서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노인의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노인의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지나친 타인에 대한 의존성이나 신뢰성 등은 범죄피해의 유인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하며, 이러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별도의 사회교육이 필요하다. 노인복지관이나 아파트단지의 경로당, 노인들이 많이 모여드는 공원 등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범죄예방교육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다. 특히 이를 통하여 한약재, 건강식품 등 고가물건의 강매행위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고, 그러한 물건을 구매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간단한 건강상식이나 건강식품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노인들만 거주하는 단독주택이나 시설에는 CCTV나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홍보하고, 그 비용을 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방안도 있다. 노인들이 인터넷을 활용하여 정보를 교환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차원에서 교육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범죄피해를 줄이는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현재 60세 이상 노인들의 컴퓨터 보급률은 44.6%로 전체 국민 보급률 63.6%에 비해 크게 떨어진다. 그런데 2000~2002년 정부나 시민단체들을 통해 정보화교육을 받은 노인은 모두 10만여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90.2%가 교육 이후 컴퓨터나 인터넷으로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였다는 연구가 있다¹²⁾.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볼 때 노인의 인터넷 활용이 각종 정보를 얻고, 스스로 자

12) 한국정보문화진흥원 <http://www.kado.or.kr/>

신의 시간과 재산을 관리하며, 동시에 범죄로부터의 피해기회를 차단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노인의 범죄예방의식의 강화와 행정부처의 지원이외에도 노인들이 그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의 보강이 요구된다. 노인전용 체육시설이나 쾌적한 공원, 오락시설 등은 노인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노인의 범죄에의 노출을 줄이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2. 경찰의 노인범죄피해방지 전략의 정비

일반적으로 사회의 소외계층으로 여성과 청소년, 그리고 노인과 장애인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현재 정부는 여성과 청소년, 그리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많은 입법과 제도를 정비하였다. 즉, 여성부,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의 설치나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성보호법, 가정폭력특별법, 성폭력특별법등을 통한 장애인보호 등 상당한 범죄예방책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노인의 범죄피해를 위한 입법이나 제도적 정비는 일천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인의 범죄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핵가족화와 가정의 해체현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노인부부만 살거나 독거노인이 늘어나 범죄의 대상이 될 우려는 더 높아졌다.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부유층 노인만을 살해대상으로 사례3의 경우는 그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그런데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¹³⁾ 2002년 말 현재 독거노인수는 61만여명으로 전체 노인인구의 16.2%를 차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경찰의 방법전략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우선 순찰지구대의 순찰시 정기적으로 이들을 방문하여 범죄예방책을 알려주고,¹⁴⁾ 범죄피해사실을 청취하는 등의 방법은 별도의 예산이나 인력을 들이지 않고도 시행할 수 있다. 노인들은 거동이 불편하여

13) 통계청 <http://www.nso.go.kr/>

14) L. Norton and M. Courlander, 1982, "Fear of Crime among The Elderly: The Role of Crime Prevention Programs", The Gerontologist, Vol.22 No. 4. 389.

경찰관서를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자신의 범죄피해사실이 오히려 남에게 알려져 비웃음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피해사실을 숨기기도 한다(이건종, 전영실, 1995:130). 따라서 경찰이 노인에게 대한 방법심방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치안문제에 대한 정보수집을 할 수도 있어 이른바 경찰이 지향하는 Community Policing을 실현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또한 노인을 배려한 경찰행정이 필요하다. 경찰청이 지난 정기국회 때 보건복지위 김성순, 김홍신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¹⁵⁾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00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노인 10만명당 교통사고 희생자수는 57.8명으로 영국의 8배, 독일의 6배였다. 그런데 일반인의 보행속도는 1.2m/초인데 비해 노인은 0.8m/초로 일반인에 비해 보속이 40% 가까이 느린데 이를 감안하지 않아 노인 보행자사고의 70%가 횡단 후반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도로사정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고, 보행자를 배려하지 않는 잘못된 운전자 의식 등도 영향이 있다¹⁶⁾. 따라서 이와 같은 교통범죄에 대한 노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신체적 특성을 고려한 신호체계의 정비와 교통문화의식의 개선, 도로의 정비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노인에게 상해나 폭행 등의 강력범죄와 폭력사범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여성이나 청소년을 위한 별도의 범죄신고라인을 확보한 것처럼 노인의 범죄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즉각적으로 이를 처리할 수 있는 핫라인을 개설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서울시가 보급중인 119자동신고기를 연계활용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즉 상해나 폭행 또는 강도 등 범죄피해시 즉각적으로 119자동신고기를 통하여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하여 범행피해 초기에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도 있고, 범인을 검거하는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¹⁷⁾. 지

15) 사이버경찰청 <http://www.police.go.kr/>

16) 지광준, 2002, 노인범죄의 특성과 그 대책, 한국노년학, 한국노년학회, Vol.21, No. 3, 5.

17) 서울시는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시내 65세 이상 무의탁노인에게 119 자동신고기를 9,437대를 보급한 데 이어 올해 2,000대를 추가로 보급하여 시내 65세 이상 무의탁 노인 2만2,322명 가운데 절반 이상(51%)이 위급할 때 구조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세계일보, 2004. 1. 30:94, 연합, 독거노인들 이젠 안심하세요

역공동체를 통하여 가정이나 이웃, 노인관련시설 등에서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주민들에 대하여 관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프로그램의 개발도 시급하다¹⁸⁾.

3.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개선

우리나라는 헌법 제30조에서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범죄피해자구조법을 1987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¹⁹⁾

범죄피해자구조법상 구조금 지급대상 피해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사망 또는 중장애를 당한 자에 한하여 구조대상이 된다(제2조). 구조대상 피해는 매우 제한적이어서 피해자가 사망하였거나 신체상의 중장애를 당한 경우에 한하여 구조금이 지급된다. 따라서 장애에 이르지 않은 신체손상 또는 질병에 관하여는 구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일정한 정도 이상의 중장애에 한하여 구조금이 지급된다. 유족구조금은 1천만원이며, 장애구조금은 최저 300만원에서 최고 600만원까지 3등급으로 나뉘어 지급된다(시행령 제12조~제13조).

구조금 지급 요건은 매우 까다롭다. 법 제2조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를 알 수 없거나 가해자의 무자력으로 인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고 그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18) Brain K. payne, Bruce L. Berg, Jeff Toussaint, 2001, The Police response to the criminalization of elder abuse An exploratory study, Policing: 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e Strategies & Management, Vol.24, No.4, 621-623.

19) 이건호, 1999,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99-09, 191.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조관석, 1992, 피해자구조제도의 운용상황, 피해자학 연구 창간호, 89이하; 박미숙, 2002, 현행법상 범죄피해자지원방안, 제11회 한국피해자학회 정기학술 대회 자료집 등 참조.

수사단서 제공·진술·증언 또는 자료제출과 관련하여 피해를 당한 때에는 생계유지의 곤란여부를 묻지 않고 구조금이 지급된다(법 제3조). 그런데 피해자와 가해자간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이거나, 피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기타 사회통념상의 지급배제사유(제6조),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를 지급받을 경우(제7조),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제8조 1항) 등은 그 지급이 거절된다.

구조금 신청건수를 살펴보면 1997년에는 98건, 1998년에는 176건, 1999년에는 169건, 2000년에는 132건, 2001년에는 97건을 각 기록하여 1998년 이후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간 총 672건의 신청이 접수되어 그 중 387건에 대해 지급결정이 이루어져 지급결정율은 57.5%로 나타났다. 지급된 구조금총액은 3,597,600,000원으로 집계되었다.²⁰⁾

이와 같은 현행 피해구조금제도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그 대상이 적고, 지원금액도 작은 편이다. 이는 피해구조금제도를 피해자에 대한 권리라기 보다는 국가적 시혜나 은전으로 여기는 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¹⁾. 그러나 UN은 1985년에 「권력남용과 피해자에 대한 정의의 기본원칙에 관한 선언」(Declaration on the Basic Principles of Justice for Victims and Abuse of Power)을 통하여 각국 정부가 행정 및 사법절차에 관한 접근, 가해자로부터의 배상, 국가로부터의 보상,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부조 등을 시행할 것을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구조금제도는 국가의 의무이며,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인 만큼 가능한 피해자가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이 따라야 한다.

특히 노인의 경우 상해나 폭행 등의 피해를 많이 받는 만큼 이러한 구조금제도가 매우 유용한 지원책이 될 수 있으므로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 대한 참고인 조사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20) 법무연수원, 2002, 범죄백서, 249-250.

21) 이윤호, 2002, 범죄학개론, 박영사, 381-383.

4. 민간 범죄피해지원네트워크의 구축

형사사법기관을 포함한 국가기관의 피해자보호정책은 범인이 검거되고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지 않으면 그 의미를 상실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범죄피해자와 형사사법기관 사이에는 해소할 수 없는 정서적 한계가 있다. 형사사법기관은 사건의 실체 확인과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궁극목표로 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입장을 전적으로 고려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나아가 국가 재정상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즉 정신심리상담과 치료에서부터 법률구조 및 재활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등 모든 범죄피해자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인력과 조직 및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렵다. 따라서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 활동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노인의 범죄피해에 대해 지원하는 별도의 민간지원단체나 시설은 전무한 실정이다. 노인복지법을 기초로 한 노인복지관이나 각종 노인관련시설은 노인의 복지와 의료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제36조~제38조). 이와 같은 열악한 현실은 범죄피해 여성이나 청소년을 지원하는 성폭력상담소나 쉼터, 학교폭력예방재단, 시민단체 등 각종 시설과 기관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것이다.

따라서 범죄피해를 당한 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의 네트워크형성이 시급히 요구된다. 물론 형사소송법이나 피해자구조법 등에 의해 형사사법기관으로부터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공식기관에 의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피해노인의 심리상태를 회복해주고, 물질적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상담해주는 민간의 지원체계가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노인범죄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에 대한 노여움과 자신에 대한 자괴감 등으로 우울증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상담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²²⁾.

따라서 현재 각 시군구에서 비용을 지원,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관

22) 홍성열, 2000, 범죄심리학, 학지사, 175-176.

에 범죄피해상담코너를 설치하여 정신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노인과 상담 중 범죄피해관련사실이 발견될 경우 담당경찰의 협조를 받도록 하거나, 담당경찰이 정기적으로 이곳을 방문하여 노인들을 상담하는 방법도 있다. 자문변호사를 두어 법률적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범죄를 예방하고, 또 구제 받는 데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여성이나 청소년을 위한 쉼터처럼 특별히 범죄피해노인을 위한 쉼터도 필요하다고 본다. 가족으로부터의 학대나 절도나 사기, 강도 등의 피해로 오갈 데 없는 노인 등을 위한 임시숙소가 지원되어야 하는 것이다.

독일의 민간범죄피해자지원협회는 독일 전역에 그 지부를 설치하고 있는 데 매우 왕성한 활동으로 민간피해자지원의 모델이 되고 있다. 일본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부분적으로 운용하고 있다²³⁾. 이 협회의 활동은 첫째, 고의적인 범죄행위로 피해를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피해자에 대한 직접금부나 구원조치 외에 피해자의 국공비지원에 관한 정보제공), 둘째, 범죄예방에 관한 공적기관의 활동지원, 셋째, 시민들에 대한 범죄로 위해를 받을 위험성에 대한 계몽과 조언, 넷째, 피해를 받기 쉬운 시민에 대한 방법교육과 지원, 다섯째, 일반인에 대한 방법지식의 보급 등이다.

이러한 활동내용은 노인피해자의 경우 더욱 절실한 지원방법이 될 수 있으며, 특히 노인에 대한 사전적 범죄예방교육과 정부가 나서기 전에 일차적으로 지원협회가 급부를 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활동은 범죄로 인하여 정신적, 심리적 상처를 당한 피해자에게 많은 용기와 위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지원은 노인에게 더욱 필요하다.

일본에서는 1992년에 동경의과대학의 범죄피해상담실이 개설된 이후 도도부현 경찰의 협력으로 전국에 10개의 지원단체가 개설되어 활동하다가 1998년에 범죄지원네트워크를 결성하였다. 2002년 4월을 기준으로 26개의 지원단체가 이 네트워크에 가입되어 있으며, 2001년도에 개정된 범죄피해자등금부금의지급등에관한법률에 의해 도도부현 경찰과 협력

23) 미야자와 고이치 저, 장규원 역, 1999, 250-254.

하며 활동 중에 있다²⁴⁾.

이 법은 경찰과 지원단체와의 협력사항과 의무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즉, 도도부현경찰은 범죄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1차적으로 범죄에 대한 정보제공, 조언 및 지도, 경찰파견, 기타 필요한 원조를 하는 동시에 2차적으로 범죄피해자등조기원조단체에게 당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피해정보 등을 제공하여 그들이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 협력할 의무가 있다. 동시에 지원단체는 경찰에게 협력하며, 피해자와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 등의 의무를 부담한다.

지원단체는 첫째, 피해자 등에 대한 홍보활동 및 계발활동, 둘째, 범죄피해상담, 셋째, 범죄피해자등급부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재정신청보조, 넷째, 물품의 공여 또는 대여, 노역제공 기타 방법에 의한 피해자지원 등이다.

범죄피해노인을 위해 이와 같은 민간의 피해자지원네트워크 시스템을 운영하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노인을 도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노인의 특성상 다른 연령층보다 상대적으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케어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노인을 위한 별도의 지원네트워크의 도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V. 결 론

노인에 대한 개념정의는 매우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노인이란 육체적으로 노화현상이 뚜렷하고, 평생 종사하던 직장을 퇴직하는 시기인 60세 혹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범죄학계나 형사사법기관에서는 60세 이상의 사람을 노인이라고 정하고, 관련 정책입안과 통계관리를 하고 있으나 노인의 복지나 취업 등과 관련해서는 그 기준연령이 차이가 있다.

24) 오오타타츠야, 도중진(역), 2002, 일본 피해자지원의 실태, 피해자학연구, 한국피해자학회, Vol.10, No.1, 56-58.

노인의 범죄피해는 형법범 피해와 특별법범 피해로 구분할 수 있다. 형법범에 대한 피해는 재산범이 가장 많으며, 다음이 강력범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95년부터 2001년까지 평균적으로 다른 연령층보다 노인의 재산범죄의 피해는 줄고, 상대적으로 강력범죄와 위조범죄, 풍속범죄 등의 피해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노인의 재산범죄 피해는 사기가 가장 많고, 다음이 절도, 횡령, 손괴, 배임, 장물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을 제외한 다른 연령층의 범죄피해와 비교할 때 노인이 사기피해를 2.88% 더 많이 당하고, 절도의 경우 6.26% 적게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범죄 피해는 상해, 다음이 폭행, 강도, 협박, 방화, 강간, 살인, 공갈, 체포와감금, 약취와유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을 제외한 다른 연령층의 범죄피해와 비교할 때 상해는 11.35%, 폭행은 3.58% 많이 당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별법범에 대한 노인의 피해는 교통사범과 폭력사범,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사범 등에 의한 피해가 대부분인데, 특히 폭력사범의 피해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주목을 끈다. 최근에는 성폭력사범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각종 정보에 어둡고,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에게 쉽게 자신을 드러내며, 육체적으로 쇠약한 노인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는 노인의 범죄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노인의 범죄피해대책은 1차적으로 범죄에 대한 노인의 경계의식이 선행되어야 하며, 2차적으로는 피해노인에 대해 국가와 사회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특히 노인의 특성상 다른 연령층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세심하고, 적극적이며, 실질적인 지원책이 요구된다. 노인을 배려한 경찰행정과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활성화, 그리고 민간의 피해자지원네트워크의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강은영(2001), 노인수형자의 특성 및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미야자와 고이치저, 장규원 역(1999), 피해자학입문, 길안사.
- 박미숙(2002), 현행법상 범죄피해자지원방안, 제11회 한국피해자학회 정기학술 대회 자료집.
- 법무연수원(2002), 범죄백서.
- 조균석(1992), 피해자구조제도의 운용상황, 피해자학연구 창간호.
- 지광준(2002), 노인범죄의 특성과 그 대책, 한국노년학, 한국노년학회, Vol.21, No. 3.
- 오오타타츠야, 도중진(역)(2002), 일본 피해자지원의 신동향, 피해자학연구, 한국피해자학회, Vol.10, No.1.
- 오홍수(2002), 한국노인범죄의 실태에 대한 고찰, 한국노인복지학회, 노인복지연구, Vol.15, 봄호.
- 이건중, 전영실(1995), 노인의 범죄 및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건호(1999), 범죄피해자구조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윤호(2002), 범죄학개론, 박영사.
- 이현희, 원영희, 구자숙(2003), 노인범죄 추이 및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회, 한국노년학, Vol.23, No.2.
- 홍숙자(2001), 노년학개론, 하우출판사.
- 홍성열(2001), 범죄심리학, 학지사.
- 문화일보(2003), 3. 27:27, 이종석, <바람개비>40대女 80노인 성추행뒤 “간통 협박”
- 한국일보(2003), 7. 28:7, 전성우, 구청공무원 사칭 노인들 등쳐/“생활보호 지정에 필요” 20여명 통장 가로채

문화일보(2003) 10. 17:31, 이종석, . 부유층 노인 연쇄살인 공포 확산 -
강남등 3곳서 20일동안 잇따라 둔기 피살
세계일보(2004), 1. 30:94, 연합, 독거노인들 이젠 안심하세요

2. 외국문헌

- Brain K. payne, Bruce L. Berg, Jeff Toussaint, (2001), The Police response to the criminalization of elder abuse An exploratory study, Policing: An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e Strategies & Management, Vol.24, No.4.
- Callie Marie Rennison, (2001), Criminal Victimization 2000 change 1999-2000 with Trends 1993-2000.
- Lawrence E, Cohen and Marcus Felson, (1979), "Social Change and Crime Rate Trends:A Routine Activity Approa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44.
- Michael S. Hindelang, Michael Gottfredson , and James Garofaro, (1978), Victims of Personal Crime, Cambridge.
- Norton L and Courlander M, (1982), "Fear of Crime among The Elderly: The Role of Crime Prevention Programs", The Gerontologist, Vol.22 No. 4.

3. 검색사이트

한국정보문화진흥원 <http://www.kado.or.kr/>
통계청 <http://www.nso.go.kr/>
사이버경찰청 <http://www.police.go.kr/>
미연방수사국 <http://www.fbi.gov/>
미형사사법자료보관소 <http://www.icpsr.umich.edu/NACJD/index.html>

【 Abstract 】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Elderly Crime Victims

Huh, Kyoung Mi

The elderly who have experienced such crimes as robbery, purse snatching, theft, misuse of money, offensive touching, and/or destruction of property. This report uses data from the Supreme Public Prosecutors' Office of the Republic of Korea to summarize levels and rates of violent and non-violent crimes against persons 60 or older. The report also discusses 1995~2001 trends, comparing the elderly with other age groups of crime victims. These crimes are murder, rape, robbery, assault, larceny, household burglary, household larceny.

The elderly are victims of crime need many different kinds of assistance. The Elderly Crime Victim Assistance Program is partially funded through the Victims of Crime Act, which was passed in 1987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services to victims of violent crimes. The Elderly Crime Victim Assistance Program focuses its efforts on elderly victims of crimes with the goal of providing services that meet the physical and/or emotional needs of elderly crime victims in order to return them to their normal lifestyle.

☼ Key Words : elderly crimes victims, elderly crime victim assistance program, elderly crime